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2020.3.9.(월) 조간	배포	2020.3.6.(금)	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50)	담 당 자	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937)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	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668)

제 목 :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입법예고

**◆ 사모·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도입을
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**(‘20.3.9일 ~ 4.20일, 42일간)

1

개 요

- ☐ 금융위원회는 지난 ‘19.10.7일에 발표한 「자본시장을 통한 혁신
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」의 후속조치로,
- 사모·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도입내용을
반영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을 입법
예고합니다. (‘20.3.9일 ~ 4.20일)
 - 사모·소액공모 관련 사항은 ‘19.10.7일에 발표한 내용(붙임 참고)
대로, BDC 관련 사항은 일부 보완·구체화하였습니다.

<참고> 사모·소액공모 활성화 및 BDC 추진경과

-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의 하나로 사모·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투자기구
(Business Development Company, BDC) 추진방안 발표(‘18.11.1일)
-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(‘19.9.26일) → 「사모·소액
공모 활성화 방안」 및 「기업성장투자기구(BDC) 도입방안」 발표(‘19.10.7일)

(1) 도입 필요성

- 현재 벤처 · 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Vehicle들이 다수 존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
 -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탈(VC) 등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, 짧은 존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.
 - 공 · 사모펀드는 운용사 · 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기업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어서 대규모 자금모집에 한계가 있습니다.
- 이에 기존 Vehicle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쏠 생애에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BDC를 도입하고자 합니다.

(2) 기본 방향

-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하겠습니다.
- 공 · 사모펀드의 장점들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하고, 다른 Vehicle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.
 - ❶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결합하겠습니다.
 - ❷ 펀드자산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, 투자자 보호장치는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.
 - ❸ 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, VC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.

(3) 세부 도입방안

가. 설립

- ☐ **(설립형태)**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고,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겠습니다. (안 §234의3①)

*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·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일정기간(시행령 위임 → 예 : 3년)의 상장 유예를 허용(안 §230③)

- ☐ **(투자대상)**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*에 BDC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(시행령 위임 → 예 : 60%)을 투자하겠습니다. (안 §229조제6호)

* ① 비상장기업, ② 코넥스상장기업, 시총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

③ 既 투자집행한 창투조합·벤처조합·신기술투자조합·창업벤처PEF 지분

→ 다만, ②, ③은 각각 BDC자산의 일정비율(시행령 위임 → 예 : 30%)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

- ☐ **(최소설립규모)**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설립 규모(시행령 위임 → 예 : 200억원)를 설정하겠습니다. (안 §234의3①)

- ☐ **(존속기간)**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,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(예 : 20년)에서 정하겠습니다. (안 §234의3①)

* 다만,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연장 가능

나. 인가

- ☐ **(운용주체)**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, 벤처캐피탈의 BDC 운용을 허용하겠습니다. (인가정책사항)

- ☐ **(인가요건)** BDC 인가단위를 신설하되, 일정요건*을 갖춘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(안 §234의3②)

* 시행령 위임 → 예 : 기존에 i) 3-1-1(모든자산) 또는 ii) 3-11-1(증권) & 3-13-1(특별자산)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

< 세부 인가방안(안) >

① (자기자본·인력) 자기자본 40억원 이상,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
(☞ 시행령 개정)

② (운용경력·수탁고) 운용경력 3년* 이상, 연평균 수탁고 1,500억원** 이상 (☞ 인가정책사항)

* 일임업 포함시, 운용업 1년 이상 / 리츠업 포함 시, 운용업 2년 이상

** 일임계약고 또는 리츠수탁고 포함시, 펀드수탁고는 1,000억원 이상

※ 증권사 운용경력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, PEF GP,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, 중기특화증권사는 운용경력요건 배제

③ (이해상충방지체계)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되, 일부 사항(예 : 기업금융업무)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(☞ 시행령 개정)

④ (대주주심사요건) “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” 보다 완화된 “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” 적용(☞ §234의3②)

※ 여타 인가요건은 현행 집합투자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

다. 자산운용규제

□ (투자대상별) 주된 투자대상기업, 안전자산, 여유자산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. (안 §234의3③④)

구 분	투자대상	투자수단	운용규제
주목적 투자 대상	① 비상장기업 ② 시총 2천억원 이하 코스닥상장기업, 코넥스상장기업 ③ 既 투자집행한 창투조합·벤처조합·신기술투자조합, 창업벤처PEF	▪ 증권, 대출, 어음 등	▪ BDC자산의 일정비율이상 (예 : 60%) 의무투자 * 설정후 1년간 유예기간 부여 ▪ ②, ③ 의 경우 각각 BDC자산의 일정비율(예 : 30%)까지만 주목적투자자로 인정 ▪ 동일기업 투자한도 예외 인정(BDC자산 20%, 피투자기업지분총액50%)
안전 자산	▪ 국채, 통안채, 국가·지자체 지급보증채권, 예금	▪ 채권, 예금 등	▪ BDC자산의 10%이상 투자 ▪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(법 §81)
여유 자산	▪ 공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 (부동산 제외)	▪ 증권, 어음 등 (대출제외)	▪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(법 §81)

- ☐ **(대출)** BDC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되, 대출 업무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 (안 §83④)
- ☐ **(차입)** BDC 순자산의 일정비율(시행령 위임 → 예 : 100%)까지 차입을 허용하겠습니다. (안 §83①②)

라. 기타사항

- ☐ **(출자의무)** BDC 운용주체는 BDC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 출자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*하도록 하겠습니다. (안 §234의3①)
 - * 시행령 위임 → 예 : 5% 이상을 의무출자하여 5년 이상 유지(단, 출자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% 적용)
- ☐ **(벌칙)**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. (안 §444)

3

향후 계획

- ☐ 금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 한 후, 금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 - ☐ 제도 도입에 맞추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- ※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 / 지식마당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'19.10.7.일에 발표한 「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」 중 「사모·소액공모 활성화 방안」 참고

1.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 신설

- ① **(사모 Track2 신설)**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*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,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 허용

* 은행 등 금융기관,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 등

현행 : 사모 Track 1	신설 : 사모 Track 2
1:1방식(전화, 문자 등)으로 50인 미만(전문가, 연고자 제외)에게 청약권유 가능	TV,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 청약권유 가능

- ② **(발행제한)**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*의 경우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 제한

* 자본시장법상 '적정성 원칙'이 적용되는 파생결합증권 등

- ③ **(광고규제)**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율체계 마련

- 광고시 일반투자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, 공시사항 등 투자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
- 발행인과 금융투자회사간 광고방법 차등화

* (발행인) 홈페이지, 본점게시판 등(인수인·주선인 없이 직접 자금모집시)
(금투회사) 광고방법 제한은 없으나, 금투협회 사전심사 의무화

- ④ **(보고의무)** 사모 발행前 및 발행後 2주내 보고의무 부과

* (발행前) 투자광고 방법, 전문투자자 확인방안 등
(발행後) 사모발행 실적(발행인 관련 사항, 자금조달 규모 등)

-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대해 감독·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징구(발행인이 10년간 보관토록 의무화)

- ⑤ **(거래제한)** 신설되는 사모 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간 거래만 허용

- 단, 해당 증권발행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반공모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일반투자자와 거래 가능

2. 소액공모 한도 이원화

① **(소액공모한도 확대)**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,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하여 대폭 확대

- (소액공모 Tier1)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
- (소액공모 Tier2)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액공모 신설

② **(발행제한)** 중소·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 및 증권유형을 제한

-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*은 이용 금지

* ①상장법인 ②모집·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

- 단, 현행 한도(10억원)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공모 허용

- 신설되는 사모 경로(Track2)와 동일하게 파생결합증권 등 발행 금지

③ **(투자자 보호)** 조달한도에 따라 단계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

- (공통사항)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 부과

- (Tier2 추가적용) Tier2는 모집금액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

i)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* 제한(전문투자자는 한도제한 無)

* (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) 2천만원 (그외 일반투자자) 1천만원

ii) 소액공모 공시서류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, 정기 공시서류에 외부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

iii) 자금모집시 인수인 또는 주선인을 통하도록 의무화

④ **(공시서류 간소화)** 중소·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간소화 방안을 검토